

서삼석 최고위원, 내년 전남지사 선거 불출마 가닥

사퇴시한 하루 앞두고 거취 표명 안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 3명 地選 출사표
鄭지도부 유지 내달 최고위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내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등 3명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도부를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장(전현희), 경기지사(한준호·김병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에 남았다.

특히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잠겨있던 서삼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식 사퇴시한(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국 불출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는 총 9명 중 3명이 사퇴하고 서삼석 최고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이 지도부에 남을 전망이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명의 최고위원만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유지된 채 다음 달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러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이날 사퇴한 3명은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방선거 필승

을 다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년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10만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 주권 정부를 완성하고 민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

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넘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4기 민주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당원 뜻이 지도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당분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동지들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개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고 내란 가담자 전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퇴한 최고위원 3명에게 꽃다발을 건네면서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주길 바란다.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 여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세 분의 장도에 건승을 빈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진수 기자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게 쏠이용자 통지해야”

권향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1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T, KT,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사건이 아닌 경우 이용자들은 사건



추가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 피해자의 경우 이 공백 기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스팸싱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건 조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례로 지난 4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공모전 접수자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42일이 지나야 해킹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유출이 확인된 1명에게만 사건을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향엽 의원실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공모전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자신이 추가 피해자로 확

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자체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0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개선TF’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법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 예방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地選 영향 줄 홍보물 안돼요”

선관위, 5일부터 불법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군부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김진수 기자

안도걸 “野, 국민연금 ‘동원론’ 사실 왜곡”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한

‘국민연금 동원론’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이 국내 최대 외환 실수요이자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초대형 기금인



만큼 환율 변동성이 연금 수익률과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국민연금의 정책 협의는 강요가 아니라 위험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금 운용이며 정치권이 왜곡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출범

한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는 외환시장 상황과 자금수급 전망을 공유하는 투명한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운영됨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